한우산업 불안 상황 타개

도, 공급과잉 지속 인한 경기회복 지연 예상 따라
단기적으로 생산비 절감 위한 사료경영 안정 지원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 위한 개량사업 집중

전북자치도는 2025년을 맞아 한우산업의 불안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료경영 안정과 한우개량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한우 전체 사육 마릿수는 2023년부터 도매가격 하락과 사료비 상승, 고령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도축 마릿수가 전년 대비 6.5% 증가한 99만 마리로 여전히 공급과잉이 지속되어 도매가격이 평년 가격인 kg당 2만원에 못 미치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 지원과 장기적 대책 마련에 66억 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한우 농가 생산비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료 구매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추가로 2023년도 지원농가 구매자금 상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예산 13억원을 투입해 50두 미만 사육농가의 경우 이자 전액(1.8%)을 지원함으로써 경기 회복 전까지 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한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한우 개량 5개 사업에 53억원을 투입해 미래의 안정적 한우 산업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개량 기반 데이터 확보를 위한 혈통 등록과 부모 일치 검사를 지원하고 암소의 과학적 능력 평가를 위해 유전자 분석사업에 집중한다.

특히, 과학적 분석을 통한 한우 개량화를 위해 추진해 온 한우 유전자 분석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분석결과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의 조기 도태를 돕기 위해 마리당 도태장려금 50만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가 스스로 좋은 암소와 저능력 암소를 구분해 선발과 도태를 통해 개량의 속도를 높여 안정적 한우 사육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한우 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생산농가의 자율적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의 한우 소비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우농가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꿈!…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도, 익산역서 캠페인 전개
도내 전역서 도민 관심 확대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21일 익산역에서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에 대한 범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익산역에서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에 대한 범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위하여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익산시 체육회 관계자 및 직원들이 동참해 '도민의 뜻모아! 힘모아! 전북의 꿈,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이 적힌 어깨띠를 메고 올림픽 유치의 필요성과 비전을 적극 도민들에게 알리며, 전북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의 뜻과 힘을 모아주기를 요청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이번 홍보활동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전북이 가진 가능성을 세계에 알릴 기회"이며, "도민의 성원과 참여가 2월 말 국내 개최 후보도시 선정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실시한 대한체육회의 현장실사 이후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결정 시까지 전북 유치에 대한 도민의 열기가 식지 않도록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응원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김관영 도지사를 시작으로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GBCH' 챌린지를 진행하며 도내 기관장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으며, 도내 대학총학생회와 체육 실업팀·대학팀도 응원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어린이창의체험관과 도립미술관에서는 올림픽 체험존과 포토존을 운영하며 가족 단위의 방문객의 관심을 이어가고, 미래의 꿈나무인 전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올림픽 유치 기원 그림 공모전도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우편접수를 받고 있다. 접수된 작품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21점의 작품을 시상하며,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도청 로비, 한옥마을내 하얀양옥집, 홈페이지 등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토대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 국제위원회와 이사회, 대의원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국내 후보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항소심 결과 질의에 답변하는 서 교육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1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지난 교유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30억원대 사업 청탁 의혹 연루는 사실무근"

박용근 전북자치도의원 해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21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과 관련한 30억 원대 사업청탁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박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2년부터 2년간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FECO 시스템(Facility Energy Control Optimization System) 도입 논의는 도청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전기료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 시스템을 도청 청사에 적용해 전기료를 절감하고, 절감된 비용을 직원 복지비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좋은 뜻으로 전문가와 도청 청사관리팀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30억 원대 사업청탁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해당 사업은 100% 국가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사업이 "도청 청사에 도입될 경우 매년 4억 2,000만원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사업에 대한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며, "도청 직원이 청사 외 도의회와 공연장 등 여러 시설에 시스템을 확장 적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제안처에 전달했고, 이에 따라 작성된 제안 금액이 약 23억원에 달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30억원대 금액은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된 내용으로 FECO 시스템 논의가 진행 중이던 도중 도청이 28억원의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태양광 시스템으로 방향을 전환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도청의 태양광 시스템 도입 제안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다."고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FECO 시스템을 배제하고, 도민의 세금이 대규모로 소요되는 태양광 시스템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일부 언론에서 자신이 수십억 원대 사업에 연루돼 청탁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노조와 한국노총 전북본부의 성명서 발표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어떠한 갑질도 없었으며, FECO 시스템의 효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의 지적과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며, 향후 도정 발전을 위해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과 도의회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하고,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도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강조했고,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자신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더욱 신뢰받는 도의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논란이 된 FECO 시스템은 조명, 냉난방, 전기 설비 등을 통합 관리하여 에너지 절약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첨단기술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형 핵방호 시스템 구축해야"

전북 백년포럼 제24강

북핵 미사일 의협에 대응, 전북형 핵방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1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 대회의실에서 '전북 백년포럼' 제24강을 개최했다.

강연자로 나선 남세규 전 국방과학연구소 소장(현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선언과 북핵 미사일 고도화·고착화로 북핵 위협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모두 북핵 미사일에 대응한 방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북핵 대응 방안으로 Kill Chain(핵·미사일 발사 움직임 선제적 타격), KAMD(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요격하는 미사일방어), KMPR(핵·미사일 공격 시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로 구성되는 한국형 3축 체계(K-TRIAD)를 압도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1만 발의 재래식 미사일을 배치, 1발의 핵무기 공격을 받으면 200발의 미사일을 일제사격(Salvo)해 대응하는 일만양탄(一萬養彈) 전략을 제시했다.

지자체 대응방안으로는 핵폭발 시뮬레이션을 가동해 그에 맞는 구체적 핵방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경우 공습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나 북핵 미사일 50발 이상 발사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북핵 미사일 발사 2분 내 지역경보, 3분 내 대피를 목표로 하는 전북형 핵방호의 실효적 점검을 주문했다.

이어 남세규 전 소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전북형 핵방호 신산업과 인프라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그 예로 전북형 핵 조기경보 대피앱(낙진예보), 방사선치료약/측정기, 차폐소재, 방사능센서/드론, 스타링크/핵방호망, 컨테이너 방호쉘터 등을 제시했다. /이만호 기자

손중열 남원시의회 의원
양파연합회와 정책간담회

남원시의회 손중열 의원이 지난 20일, 남원시 양파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파연합회 회원 10명과 농업기술센터 김연주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8명이 참석, 농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양파농업 시책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양파연합회는 △ 양파 기계화 사업 △ 기계 정식을 위한 육묘판의 지원 △ 양파 종자 발아실 △양파 육묘장 △ 배수판 △양파보관 및 기계 보관창고 필요성 등 양질의 양파 생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연주 소장은 "각종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일단 연합회가 하나가 되어 공모사업에 충족할 만한 경작 면적을 확보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선제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되면 농가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중열 의원은 "먼저 양파작목반이 지역별로 일원화되고 연합회로 화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양파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남원시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못난이 농산물' 유통 서비스 체계화 시급

국주영은 도의원, 조례 제정 위한 정책 토론회 열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주영은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 조사 결과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 비용이 연간 최대 5조 원에 달하며, 맛이나 영양 등에서 전혀 차이가 없으나 표준 규격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등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내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창한 센터장은 "도내 14개 시군의 20개 전략품목 중 못난이 농산물 발생량은 과채류 19,558톤(486억원), 엽채류 2,560톤(80억원), 조미채소류 15,459톤(311억원), 과일류 16,358톤(52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센터장은 "해외에서는 '푸드 리퍼브' 시장이 유럽 전역과 북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어르리어스 마켓(2020년 설립), 못난이 마켓(2023년 설립) 등에서 못난이 농산물 정기배송을 실시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못난이 농산물 발생 및 유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유통채널을 활용해 유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산 조기심 대표는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일반 농산물보다 30~40%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주 의원은 "도내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완주군의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설 명절을 앞둔 21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번 위문 방문은 지역 내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 성심너싱홈 △실로암요양원 △삼례노인복지센터 △삼봉 효앤정 데이케어센터 △(재)가난한이들의 작은자매회 △베데스다의집 등 총 6개 시설을 차례로 방문했다. 의원들은 시설 입소자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순창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주요업무 계획 청취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21일,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올해 첫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창군이 2025년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손종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민의 대표로서 군정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대안을 제시해달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조정희 의원이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최용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과 마화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경제 회복 대책 수립 및 실행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며, 다양한 정책적 제안이 이루어졌다.

순창군의회는 이날 오후부터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순창=이양원 기자